



## 독일 · 프랑스,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방안 마련 합의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9일 유로지역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함.

-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 및 유로지역 은행들의 자본확충 방안, 유로지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11월 초 프랑스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 이전에 제시하겠다고 합의함.
- 사르코지 대통령은 아직 세부사항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다른 유럽 정상들과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힘.
- 메르켈 총리는 10월 17~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유로 정상회담이 이번 이슈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함.
- 10월 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미국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, 그 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지역 재정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져 왔음.

■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재정안정기금(EFSF)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, 독일과 프랑스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유로지역 15개 국가의 합의를 적기에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.

- 메르켈 총리는 IMF 및 다른 유럽 정상들과의 논의에서 은행 자본확충에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은행이 우선적으로 시장과 각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자본을 조달해야 할 것이며 EFSF는 이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힘.
- 반면 프랑스는 은행 자본확충에 있어 각국 정부의 지원보다는 EFSF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EFSF 활용방안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.

-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유로지역 15개국의 합의를 적기에 이끌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.
- 유로지역 재정 위기가 불거진 후 세계의 관심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유로지역 디폴트 충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.
  - 메르켈 총리는 모든 유럽 은행들이 자본확충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했으나 유럽금융당국과 IMF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유로지역 내 모든 은행이 고려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.
  - 독일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EU가 은행들에게 바젤II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8%보다 높은 10%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함.
  - IMF는 프랑스의 은행들이 부실국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, 유로지역 은행들에 대해 최대 2,670억 달러의 신규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- 한편 IMF의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IMF가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에 대비해 회원국 정부에 단기여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 - IMF의 방안에 따르면 IMF가 제공할 단기여신 규모는 각 국가의 IMF 기여금의 세배 수준이며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합하면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.
  - IMF의 단기여신 규모는 EFSF 규모인 4,400억 유로(5,910억 달러)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나 이탈리아, 스페인 등이 완전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한국과 같이 경제기반이 튼튼한 신흥국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.
  - IMF는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 등에 대해 장기여신을 제공한 바 있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단기여신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.

(Financial Times 등, 10/9)